

# 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## 경제전환기에 대응한 관광산업 정책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12.

[http://www.kcti.re.kr/03\\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60&pageNum=3&groupNum=1](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60&pageNum=3&groupNum=1)

### 관광시장 개척을 통한 국민경제 규모 확대,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 기반 구축

### 혁신과 투자확대로 관광산업 고도화,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고용창출 확대

- 관광산업 동향 및 현황
  - 우리나라 국내 관광시장 규모는 약 402 조원(2012 년 기준)으로 지난 20 년간 연평균 7.8%씩 증가
  - 2012 년 한국 방문 외래관광객은 전년 대비 13.7% 증가한 1,114 만 명, 국민 해외여행객은 1,374 만 명
  - 국내 관광사업체 수는 16,144 개(2012 년 기준), 종사자 수는 204,579 명(2011 년 기준)
  - 매출액은 20 조 1,970 억원(2011 년 기준)으로 전년 대비 13.0% 증가
  - 근로자 1 인의 노동생산성은 연간 2 만 3 천 달러로 미국과 일본의 30%, 유럽의 절반 수준
- 관광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
  - 관광시장 개척을 통한 국민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내수 관광시장 확대 등
  -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관광수용태세의 질적 개선, 국제적 수준의 관광 매력물 개발, 관광산업 품질관리체계 구축
  - 혁신과 투자확대로 관광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광산업 투자환경의 개선, 민간투자 재원 조달체계 개선, 관광산업 혁신 지원체계 구축
  - 인적자원의 고도화 및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관광 전문 인력양성과 관광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제고 등
  - 관광산업의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구축, 관광산업 동반 성장 및 상생 협력 체계 구축, 관광법제 정비, 정부의 재정 지원체계 정비

# 1 인가구 여가활동 분석 및 대응정책 연구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

[http://www.kcti.re.kr/03\\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78&pageNum=1&groupNum=1](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78&pageNum=1&groupNum=1)

## 1 인가구에 대한 체계적·미래지향적인 여가정책 지원 강화, 여가수요 확대, 여가 창조산업 육성

- 배경
  - 우리나라의 1 인가구는 전체가구의 23.9%(2010 년)이며, 2035 년에는 1/3에 달할 것으로 전망
  - 1 인가구의 증가세는 청년·장년·노년층 1 인가구의 증가와 같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
  - 1 인가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여가문화 향유 및 소비주체로서 1 인가구의 사회·경제적 영향력 확대
- 1 인가구 여가활동 실태 분석
  - 1 인가구의 여가활동은 TV 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며,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 수준은 높지 않은 편
  - 실태조사 결과 1 인가구 응답자는 ‘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·보급’, ‘다양한 여가시설 늘리고 개방’, ‘여가관련 전문 인력 양성·배치’, ‘소외계층을 위한 여가생활 지원’ 등의 정책을 중요시
- 결론 및 정책제언
  - 1 인가구는 여가문화 향유 및 소비주체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, 여가적 관점에서 1 인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지원 강화가 필요
  - 1 인가구의 증가세와 다양성을 고려한 여가수요 확대 및 여가 창조산업 육성
  - 1 인가구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1 인가구 세부유형별로 실태조사를 통한 기반 구축

#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

[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research/view.jsp?bid=12&ano=1626&key=title&query=소득분배&ryear\\_value=2014&content\\_type=1&querystring=cnllyxfdmfsdwu9mjaxnczrzxk9dgl0bgumcxvlnk97iam65od67ae67cw](https://www.kihasa.re.kr/html/jsp/publication/research/view.jsp?bid=12&ano=1626&key=title&query=소득분배&ryear_value=2014&content_type=1&querystring=cnllyxfdmfsdwu9mjaxnczrzxk9dgl0bgumcxvlnk97iam65od67ae67cw)

## 산업구조의 변화나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 고용에 대한 양적지표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 촉진은 신중하게

- 1990 년 이후 한국 산업구조 변화의 특징
  - 생산측면에서 1990 년대의 탈공업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재공업화
  - 고용구조 측면에서 탈공업화 내지 서비스화 지속
  -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 상승세와 고용구조상의 제조업 비중 하락세
  - 산업간 생산성 격차의 변화는 제조업과 서비스 간에서 뿐 아니라 제조업 내에서도 나타남
- 산업구조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
  -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 모두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침
  -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구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
- 정책적 시사점
  - 산업정책을 설계할 때에 산업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
  - 산업구조의 변화나 산업구조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
  - 고용에 대한 양적지표 개선을 위해 서비스업으로의 취업 촉진은 신중하게 검토
  - 금융업이나 사업서비스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 하나, 저소득 종사자가 많은 개인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

#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삶의 질 구성요소와 실태 연구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12.31

[http://www.krihs.re.kr/html/2\\_paperinfo/report\\_read.asp?](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read.asp?id=3598152&page=3&search_kind=0&search_text=&search_text1=&r_kind=4&start_year=0&end_year=0)

[id=3598152&page=3&search\\_kind=0&search\\_text=&search\\_text1=&r\\_kind=4&start\\_year=0&end\\_year=0](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read.asp?id=3598152&page=3&search_kind=0&search_text=&search_text1=&r_kind=4&start_year=0&end_year=0)

##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삶의 질 구성요소 지원 시 단지중심과 지역단위로 서비스의 구분이 필요 공공임대주택에도 시설충량제를 적용하여 주민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

- 배경
  - 공공임대주택은 2011 년 현재 145 만 9 천호로 총 주택재고 대비 8.1%이며, 30 년 이상 주택재고도 총 주택의 4%
- 주요 결론
  -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제공 외에 일자리, 보육, 방과 후 교육, 건강지원, 노인·장애인 돌봄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자들의 삶의 질 제고가 필요
  - LH 공사가 시행하는 관련 서비스들은 단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반면, SH 공사는 단지가 아닌 광역 단위로 서비스가 시행됨
  - 공공임대주택 유형별, 입주자의 생애주기별로 단지 내 삶의 질 요소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다르게 나타남
- 정책제안
  -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삶의 질 구성요소 지원 시 단지중심과 지역단위로 서비스의 구분이 필요
  - 공공임대주택 유형별, 입주자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도 시설충량제를 적용하여 주민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
  -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 입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폐쇄형과 인근 주민까지 확대하는 개방형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비스 유형별로 시행
  -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거점으로 하여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교육 사업과 방과 후 공부방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부처형 사회적 기업을 검토

#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주거특성 분석 및 시사점

KB 경영연구소 | 부동산리포트 | 2014. 2. 11

[https://www.kbfg.com/kbresearch/index.do?alias=report&viewFunc=default\\_details&categoryId=1&subCtgId=&menuId=14&boardId=103&rBoardId=103&articleId=1002637&sTxt=&sType=&pageNo=1](https://www.kbfg.com/kbresearch/index.do?alias=report&viewFunc=default_details&categoryId=1&subCtgId=&menuId=14&boardId=103&rBoardId=103&articleId=1002637&sTxt=&sType=&pageNo=1)

##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주택 매각 후 소형주택으로 이전 시 복지차원에서 부동산세의 경감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개발 및 공급 방안이 필요

-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 성향 설문조사 결과
  - 거주주택 유형은 아파트/주상복합 65.9%(369 명), 단독/다가구주택(17%), 연립/다세대주택(13.7%), 기타(3.4%) 순이며, 거주주택 형태는 자가 81.1%, 전/월세 18.4%, 기타 0.5%
  - 은퇴 후 주거이주 의향은 안락한 노후생활 49.8%, 경제적 부담 20.2%, 현 주택의 관리문제 4.5%
  - 은퇴 후 거주 희망주택은 전원주택 42.9%, 아파트 30.7%, 단독/다가구주택 13.0% 순
  - 이주 희망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48.6%, 서울 16.9%, 지방거주 34.5%
  - 향후 목돈 지출 예상 요인은 채무상환 32.5%, 자녀 교육자금 19.8%, 자녀 결혼자금 19.3%, 주택 마련/확장 12.1%
- 시사점
  - 베이비부머 2명 중 1명은 은퇴 후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
  -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속 직장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시행
  -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주택을 매각하고 소형주택으로 이전 또는 이주하는 경우 복지차원에서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 등 세제 경감이 필요
  -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거주주택 리모델링 니즈 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리의 융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
  -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주택에 대한 니즈 및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수익형 주택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모색
  - 베이비붐 세대는 높은 이주 의향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주택개발 및 공급 방안 검토

## 창조산업 집적현황과 지역연계전략

국토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2. 31

[http://www.krihs.re.kr/html/2\\_paperinfo/report\\_read.asp?id=3598209&page=1&search\\_kind=0&search\\_text=&search\\_text1=&r\\_kind=4&start\\_year=0&end\\_year=0](http://www.krihs.re.kr/html/2_paperinfo/report_read.asp?id=3598209&page=1&search_kind=0&search_text=&search_text1=&r_kind=4&start_year=0&end_year=0)

### 창조산업 관련 정책 및 지원은 각 지역에서 잠재력을 보유한 창조산업을 활용

### 정부 주도 지역개발에서 탈피 중앙·지방정부간 협력적·융복합적 지역개발체계 파트너십 구축

- 창조산업 집적 현황 및 집적지
  - 2010 년 창조산업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6.4%(113 만 명)로 2000 년 대비 32.2% 성장
  - 시도별 종사자 수는 서울이 가장 많으며, 서울의 창조산업 종사자 밀집 상위지역은 강남, 서초, 금천, 중구, 구로, 영등포, 마포, 종로구 등
  - 부문별로 서울,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, 특히 실용적 창조, 미디어 산업 등에서 강한 집중도가 나타남
  - 창조산업은 수도권 및 동남권에서 높은 집적을 보이고 있으며, 문화자산, 출판 및 인쇄를 제외하고는 도시적 입지특성이 강함
- 정책제안
  - 창조성, 창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은 각 지역에서 잠재력을 보유한 창조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간발전전략 수립·강화
  -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생산·교류·지원이 가능한 창조적 신공간 조성
  - 문화적 어메니티, 장소의 다양성, 첨단서비스 체계, 거주여건, 쉴 수 있는 문화·환경 등 우수한 질의 창조적 생활공간 조성
  - 정부, 관 주도 지역개발에서 탈피하여 중앙·지방정부간 협력적·융복합적 지역개발체계 파트너십 구축

#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기반시설에 관한 기초연구

한국교통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1. 30

[http://www.koti.re.kr/board/report/index.asp?code=research\\_report&cate=1&mcode=040100](http://www.koti.re.kr/board/report/index.asp?code=research_report&cate=1&mcode=040100)

## 사람 중심 교통기반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함께 주민 의식수준의 개선

##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기반시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와 정책의 개선

- 현황 및 문제점
  - 주택가 생활도로의 경우 자동차가 대부분의 도로 공간을 점령하여 보행자의 통행불편이 심각
  - 건널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거리가 멀어 지하도를 지나서 가야하는 불편 야기
  - 생활도로나 횡단보도에서 조차 자동차 위협이 심각한 수준
- 연구결과
  - 사람 중심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개념정립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칭 ‘사람 중심 교통기반시설 계획 및 설치에 관한 법령’ 제정이 필요
  - 사례조사를 통해 서울 강남·북 지역의 사람 중심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
    - ‘보도의 공급률’부분에서는 강남 사례지역이 강북지역보다 우수
    - ‘가로수가 있는 보도비율과 보차분리’부분에서는 강북 사례지역이 우수
  - 사람 중심성 평가를 위한 사람 중심성 평가지표와 이를 정량적 척도로 서열화하여 특정 지역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사람 중심 시설의 LOS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
- 정책 제언
  - 자동차 중심의 도시교통기반시설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선과 함께 주민 의식수준의 개선이 필요
  - 사람 중심의 도시교통기반시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이 필요

#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정책 개발 및 활용성 증대방안

한국교통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 11. 30

[http://www.koti.re.kr/board/report/index.asp?code=research\\_report&cate=1&mcode=040100](http://www.koti.re.kr/board/report/index.asp?code=research_report&cate=1&mcode=040100)

공공 및 민간에서 수집한 교통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할 핵심인력 양성

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한 법·제도적 개선

- 배경
  - ICT(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)의 발전에 따라 교통 데이터 수집 범위 확산
  - 빅데이터 기반 교통정책의 개발 및 활용성 증대 방안의 필요
- 교통부문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방안
  -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 생성
  -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수립
  - 데이터 융합에 기반을 둔 신규 분야 창출
-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
  - 빅데이터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써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빅데이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결책을 모색
  - 공공과 민간에서 수집한 교통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·분석할 전문 인력의 양성과 민·관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
  - 교통 분야 빅데이터를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·제도적 개선이 필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  
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  
email: [urbandata@si.re.kr](mailto:urbandata@si.re.kr)  
phone: 02-2149-1022